



세월호

온전한 보존·수습!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선 정국 뜯어보기

- 문재인·안철수 양자 구도 파악하기
- 대선 후보 공약 비교 • 우파의 '차악'이 된 안철수

2, 6~8, 10면

트럼프의 미국
시리아 폭격과
항공모함 한국 배치

5, 12면

박근혜 일당의
재판 상황

8면

사드 반대 운동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11면

광고

청년·학생 모여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4월 29일(토)~30일(일)

5면

문재인 vs 안철수 대결에 촛불운동의 염원은 없다

김문성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안철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하며 대선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일부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적어도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자체는 이제 현실로 보인다.

안철수 지지율 상승은 우선 구 여권이 워낙 대중적 불신을 사 도저히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의 지지율은 합쳐도 대체로 10퍼센트가 안 된다.

원내 제2당의 대선 후보가 같은 우익에게서 최악을 막기 위해 사퇴하라는 소리를 듣는 걸 보면 고소하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박근혜 출당요구를 거부했는데, 정작 친박 핵심 조원진은 박근혜를 지키려고 그 당을 탈당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

이런 웃기는 자들에게 9년이나 통치받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다.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대 정신이 된 적폐 청산

과 구 여권 정당들이 군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변화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만든 것이다. 퇴진 운동은 박근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그 추한 실상을 더는 감출 수 없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 따위 인간을 상징 조작해 정권을 잡고

혜택을 누리 온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이 확 커졌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서가 대세가 됐고, 그래서 주류 야당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중도 보수층을 두고 경쟁하는 자본주의 야당들의 양강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 많은 촛불 운동 참가자들에게 쓸쓸한 일일 것이다. 촛불들은 문재인·안철수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지배계급이 두 후보를 이미 길들이고 있고, 둘은 그에 순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급히

이동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서 문-안의 체제 수호적 행보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두 후보는 … 대통령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경쟁을 해야 한다. 안보를 맡길 수 있고, 경제 쇠락을 되돌리고, 국민을 통합할 사람임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런 시도가 먹히는 데에는 지배계급이 국회 탄핵소추와 현재 탄핵, 박근혜와 재벌 총수, 측근 실세들을 구속해 대중의 성난 기세를 누그러뜨려 온 효과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퇴진 운동의 유력한 이데올로기가 주류 야당의 헤게모니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도 봐야 한다.

여기에는 운동의 내용이 계급적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혁명적 좌파도 기층에서 대중을 계급투쟁적으로 돌파구를 내는 쪽으로 인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가 기층 대중의 염원을 굴절시키는 메커니즘인 점도 봐야 한다.

강철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국민의당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아마 IT 자본가 출신 안철수가 훨씬 더 친화적으로 느껴지는 탓일 게다.

안철수도 보수층에 본격적으로 구애하며 이런 상황 변화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사드 배치 찬성에 유보적이던 입장을 버리며 적극 찬성을 분명히 했고, 10일에는 의료 민영화 등 친기업 규제 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도 안 한 박근혜의 사면을 시사하고, “적폐 청산”에 반대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

이는 단지 득표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안철수는 한국 지배계급 다수가 최근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 정책들을 최근 쏟아낸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박근혜의 대표 적 폐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철수의 최근 태도는 그의 계급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안철수는 자수성가한 벤처 기업주로 유명해졌지만, SK 최태원과 함께 회사를 세우는 등 확고히 자본가 계급의 일원으로 살아왔다. 비리로 구속된 최태원의 사면 캠페인에 참여했고, 그 자신이 천억 원대 자산가다.

그는 한때 자수성가 신화로 노동계급 청년들에게도 선포되는 인물이었다. 때마침 분 힐링 열풍 덕분에 국민적 멘토로 인기를 얻고, 2012년 대선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그때조차 그는 성장과 안보를 강조하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 국민들이 원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반(反)이명박 정서를 낚은 정치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층의 강력한 정권 교체 염원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의 정치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그의 자강론, 강철수론은 단지 이미지 쇄신인 것만이 아니라 (특히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지지층에 일일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는 호남의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서도 만만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기반 때문에 이번에도 안철수는 문재인보다 먼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해야 했던 것이다. 지지를 상승에도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은 서로 상반된 기대를 거는 지지층을 “덧셈”한 결과지만, 그 덧셈은 결코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없다. 결국 모순된 지지층 때문에 안철수는 문재인 못지 않게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결국 개혁적 지지층을 배신할 때만 “강철수”가 될 것이다. 이따금 그냥 놔두면 지배계급 전체에 해를 끼칠 부패 인사를 제거하는 일은 지지할지라도 말이다.

보수 언론 등 우익 세력은 안철수가 당선하지 않더라도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을 이용해 문재인을 견제하고 가능하면 문재인이 더 노골적인 우경화도 이끌어내길 바랄 것이다. 안철수가 당선하면 여당이 의석을 40석밖에 못가진 약체 정권일 테니, 길들이기 더 쉽다고 볼 수도 있다.

우익들의 안철수 궁여지책 선택에는 퇴진 운동이 바꾼 정치 지형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노무현 5년, 민주당 10년

이런 상황에서 호남 등의 개혁 염원 야권 지지층이 계속 안철수를 지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애써 박근혜를 중도 퇴진시키고 치르는 선거에서 다시 보수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약점 때문에 퇴진 운동 초기에 박근혜 퇴진을 지지한 것 말고는 한 게 별로 없는 안철수가 득을 볼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5년, 길게는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대중이 개혁 염원을 배신당하고 삶이 더 힘들어진 환멸의 경험에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명박이 등장해 새로운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친노 정치인들은 지지층의 기대가 너무 커서라거나, 노동운동과 진보 세력이 성급하게 정권을 비판해서라는 열도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민주당 정부들의 실패를 온통 남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그래서 진보적 변화 염원 대중은 문재인에 대해 떨떠름해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안철수가 정권 연장 세력과 손잡았다고 비판하지만, 그동안 문재인이 행보를 보면 안철수와 특별히 다른 게 없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지난해 총선부터 줄곧 중도 보수층을 더 끌어들이려고 경쟁해 왔다.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는데도 박근혜 정권의 각종 악행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박근혜의 친기업 규제 완화나 노동 개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세월호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줄곧 유가족 뒤통수만 쳐 왔다.

결국 오른쪽 눈치를 봐 온 것이 오히려 우익의 기를 살려 줘 지금 안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니 지금 곤경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자신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조건부지만 사드 강행을 애기고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



총의 노동공약 집의에도 답변 시한을 어겨 마지못해 지각 답변을 했다.

물론 문재인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일부와도 연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운동 안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할수록 정치 지형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문재인은 노동계급 대중에게 지지할 동기를 부여하지도 못한다.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그런 점에서 촛불 운동을 화끈하게 변형했던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에게 유리해 패배가 예상된) 민주당의 경선 룰에 순응하고는 문재인 지지를 단순히 선언한 것은 유감스럽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더니, 경선 패배 후 힐러리를 지지해 지지층을 실망시킨 샌더스의 잘못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두 주류 야당의 위선적 차별화 경쟁을 비판하고 있

으나, 경쟁 구도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안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면서 완주 여부가 (그 가능성이 높여졌음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쟁점으로 남아 있고, 대선 이후 연립정부 참여 문제로 노동운동 안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적 약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국주의 문제에서도 약점을 드러냈는데, 심 후보는 유일한 노동계 후보로서 진보적 변화를 염원

하는 대중을 잘 대변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야당들에게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단호하게 행동할 때야 박근혜 퇴진 요구를 지배계급이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민중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좌파가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김승주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 톤이 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 수로 치면 4~5천 명에 해당하는 무게다. 이 철근 수백 톤은 규정을 어긴 채 부실하게 고박됐다. “고박 규정을 다 지키면 적재 공간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화물을 과적하니 그만큼 평형수를 빼야 했다. 참사 당일 세월호는 화물은 최대 적재량의 갑절 이상, 평형수는 최소 필요한 양의 절반 이하를 실었다!

9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한발 더 나아가 세월호 자체가 애초부터 제주 해군기지 물동량을 노리고 청해진해운이 들여 온 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의 영업 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청해진해운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세월호 도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선박 사용 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덕분에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간 쓰던 낡은 배를 구입해 올 수 있었다. 오래된 중고 선박 가격은 새 여객선 가격의 10분의 1 정도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주요 건설자재 입항 화물량이 급격히 상승해 2013년에는 갑절 가까이 폭증했다. 청해진해운은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해 일본에서 사온 배를 급하게 증개축했다. 이명박 정부가 구랍비 바위를 폭파하며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이쯤 되면 정부가 과적을 눈감아 준 수준이 아니라 지시했을 공산이 크다.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 과적은 구조방기와 규제 완화의 책임만이 아니라,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직접적 책임이 정부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는 위험천만한 친제국주의 정책을 위해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었던 것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이 급하게 증개축한 세월호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선수 우현에 있던 램플 무턱대고 떼어 내면서 배 왼쪽 부분이 30톤 무거워졌던 것이다. 세월호 선원들은 이 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라고 불렀다.

복원성도 심각하게 나빠져서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은 절반으로 줄고, 놓아야 하는 평형수는 네 배로 늘어 버렸다. 이런 배로 과적 운행을 예상로 하며 이윤을 내온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선급, 인천항만청, 인천해경 모두 세월호의 문제점을 눈감아 주며 허가해 줬다.

심지어 청해진해운은 2011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종합우수선사로 선정됐고, 2013년에는 인천해경·항만청 등의 합동 특별점검에서 비상훈련 실시 분야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물로 올라온 세월호.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만 봐도 처벌해야 할 책임자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세월호와 함께 '돈보다 생명' 요구도 지워버리려 했다

예견된 허술한 대처

정부는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수많은 정책으로 대형 참사를 사실상 '준비'해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난 관리에 대한 재정 투입은 마이너스 4.9퍼센트를 기록했다. 있던 것도 없었던 것이다. 선박 좌초 시 대처를 담당하던 지방 해양경찰청들의 수색구조계가 예산 축소로 없어졌다.

2012년에는 '수난구조법'을 개정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구난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기도록 했다. 해경은 “해양 사고는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민간하고 네트워크를 잘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유일한 경비정 123정 대원들은 평소와 빠진 사람 가까이 가서 구명벌을 던져 주고 그것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 배웠다. 그마저도 2014년 2월 정기 인사로 직원이 바뀐 뒤에는 훈련이 없었고 김영일 정장도 그 일부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한 대원이 123정 내 취

사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지경이었다.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가 '진짜로' 달라지려면 실제로 기업주들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에 제동을걸고, 기업주들로부터 대대적으로 세금을 걷어 안전에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얹는 소리를 내며 더 많은 앞잡배기 공공사업들을 시장으로 넘기라고 아우성치는 자본가들을 위해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참사를 낳은 여러 친기업·이윤 우선 정책들을 그만 둘 생각이 없었다.

박근혜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강행하기 위해, 사람들의 기억에서 세월호를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특히 '돈보다 생명'이라는 세월호 운동의 기치가 노동자들의 투쟁, 특히 철도나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 등으로 연결될까 봐 염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선제 인양을 차일피일 미뤘다.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로막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

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끈질기게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도덕성을 훼손하려고 유가족을 '돈벌레', '세금도둑' 취급하며 모욕했다.

동시에 또 다른 참사를 낳을 정책들을 지속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주의 돈벌이 방안이 가득했다. 정부는 안전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 안전 기능을 상당수 독점”하고 있다면서 안전 규제를 더욱 풀 것도 암시했다.

심지어 재난 피해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는커녕 민간 재난 보합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의료·철도 민영화도 추진했다.

그러는 사이에 메르스 참사, 판교 환풍구 사고, 가슴기 살균제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제2, 제3의 세월호'들이 설 새 없이 발생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든 세월호특조위가 정부·여당의 방해와 주류 야당의 배신 또는 무관심으로 강제 종료되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 규명의 첫 발걸음도 못 뗐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확실히 기득권층의 진실 규명 방해 시도는 집요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했다. 참사 이후 1, 2년 사이만 해도 참사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나 친기업적 정부 정책, 정경유착 등 큰 틀에서 분석한 서적들이 많이 나왔다.

세월호특조위도 곳곳을 뚫고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 과적 사실을 밝혔고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의 이동이 침몰에 끼친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추정했다.

그래서 진실이 1백 퍼센트 규명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누군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제1의 책임자인 박근혜가 감옥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박근혜가 구속 수사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은 황교안과 우병우,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지시한 김기춘도 쫓겨나도록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뒤따라 수갑을 차야 할 해수부, 해경 책임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로 2백5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공직자는 단 53명뿐이었고 이 중 처벌받은 공직자는 딱 한 명, 123정 정장뿐이기 때문이다.

아직 국가 요직을 돌아다니며 땡땡거리고 사는 이들을 당장 잡아들여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정의 아니겠는가?

진상 규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이자들을 처벌하고 권력에서 몰려나게 한다면 참사의 진실을 찾는 길도 한결 가까워질 것이다.

▶ 4면으로 이어짐

새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21

19호 2017년 3~4월

13,000원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02-2265-6354, chaekgalpi.com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9호 2017년 3~4월

13,000원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 3면에서 이어짐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소방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이 건물을 허가했다. 하지만 화성군수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나머지 화성군 공무원들도 모두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였다.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대구지하철공사는 비용을 이유로 유독 가스를 많이 내뿜는 내장재를 사용했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1인 승무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안전 점검을 위한 인원이 부족했다. 그러나 사고 책임자 중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시설부장만이 기소됐고 결국 둘 다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부가 참사 책임자들에게 이토록 관대했던 것은 정부 자신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느라 공공성과 대중의 안전은 뒷전에 두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



정권 교체에만 기대서는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겠다면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서 역대 정권들 중에 가장 많이 규제를 없앴다. 식품 관련 규제 1백건이 폐지되고 67건의 기준이 완화돼 "식품 위생과 안전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 완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될 정도였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슴기 살균제들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출시된 시기도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다.

김대중은 IMF 위기 이후 대대적인 전력·가스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런 정부의 계획은 2002년 발전·철도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에 부딪히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대형 안전 사고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제일 컸다. 노무현 정부의 단일한 대응과 거짓말, 책임 떠넘기기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 주민들이 '기름 쓰나미'를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사고 발생 뒤 24시간이 다 되도록 방제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뒤늦게 지급된 방제 물자와 방제 작업도 유명 해수욕장들에 집중됐다.

노무현 정부는 제2의 IMF라 불린 한미FTA 체결을 강행했고 그 일환으로 2004년 7월 포스코의 천연가스 직도입을 허가해 가스 민영화의 길을 열었다.

철도 민영화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꿨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 체계인 철도산업기본계획안을 입안했다. 인천, 광양, 부산, 제주 등에 외국 영리 병원을 허용했고, '물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으며 노골적으로 물 민영화를 추진했다.

사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인 제주 해군기지도 김대중이 처음 논의하기 시작해 노무현이 결정한 사업이다. 민주당 정부의 친제국주의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 와중에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살해당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적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돈벌이를 도와야 한다는 데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도 봐야 한다. 장기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압력은 어떤 정부도(정의당 같은 개혁주의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거스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새 정부는 자본가들이 가하는 압력과 '적폐 청산'에 대한 대중의 열망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세월호 운동의 요구를 성취하려면 국가에 맞선 싸움은 계속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권 교체에만 기대다 투쟁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의혹과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혹과 가설을 제기하는 것과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오컴의 면도날' 또는 '사고 절약 원리'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 이론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개연성이 낮은 가정을 계속 쌓아서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비워 두고 무리하게 추측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매우 음모적인 것은 맞지만(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무수한 음모가 있었다), 음모론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대중이 통제할 수 없는 지배자들의 음모에 의해 세계가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무력감을 퍼뜨리고 대중을 수동화시켜 운동을 약화시킬 뿐이다.

예컨대 참사 당일 세월호에서 누군가 무거운 닻을 떨어뜨려 배를 전복시켰다고 보는 파파이스 김어준 씨의 주장을 보자. 김어준 씨는 박근혜가 국정원 대선 개입을 감추려고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음모론이다.

(7천 톤짜리 배를 뒤집을 만큼 무겁고 큰 닻을 어떻게 들키지 않고 내릴 수 있는지는 제쳐 두더라도) 세월호 참

사가 일으킨 공분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 크게 일조한 것만 봐도,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마땅한 근거도 없이 국정원 대선 개입 쟁점을 끌어온 것은 상상에 가까운 추측이다.

만약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보인 무능, 무관심, 무책임이 '음모'라면 메르스 참사나 가슴기 참사에서 국가가 보인 무능, 무관심, 무책임도 모두 음모로 봐야 할까?

음모론은 세계가 극소수의 지배자들이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그 지배자들은 우리의 머릿속까지 조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싸움을 나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생각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의 지배자들은 강력한 지배 수단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코 전지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지금의 박근혜를 보라).

음모론이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평범한 대중이 저항을 벌이고, 그 저항을 통해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무기력하고 비관적인 세계관이다.

한편 음모론은 자신의 개연성 낮은 가설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

되는 가설들은 무시하거나 깎아 내린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취사선택된 정보들만 보면 얼핏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른 증거와 정황을 함께 고려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세월X'라는 영상을 발표한 자로는(배가 인양된 지금은 그 주장의 오류가 입증됐지만) 잠수함 같은 큰 물체가 세월호에 충돌해 배가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자로는 그 영상에서 자신의 가설을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 화물의 이동, 부실한 고박이 침몰에 끼친 영향을 부정했다. '화물이 많이 실리긴 했지만 과적은 아니고, 고박이 부실하긴 했지만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다'는 식이다.

자로는 그 과정에서 특조위가 조사한 것들(참사 당일 배에 실렸던 화물의 무게, 화물의 이동이 침몰에 끼친 영향 등)은 무시하고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인천항만공사의 자료를 사용했다.

이런 주장은 결국 정부와 자본에게 면죄부를 준다.

자로는 체제나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대신, 세월호 참사를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참사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바람이나 파도 때문에 세월호는 항해를 중단

해야 할 만큼 왼쪽으로 기운 적이 있었다. 배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화물 과적 때문이었다.

한편 재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돼, 해경이 평소 받은 훈련은 바다에 빠진 사람 건져 내는 것뿐이었다. 이러니 어떻게 123정 대원들이 참사 현장에서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일어났을 참사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온건한

우연과 음모로 참사를 설명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에 기대는 듯한 사람들이 있다. 우연과 음모가 아니면 국가의 구조 방기나 진실 은폐 의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체제나 국가 자체가 아니라 박근혜 개인 또는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로 축소하려고 한다. 그 결과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 없이 정권을 교체하는 게 급선무가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덮으려고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는 식의 사고도 대통령 선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음모론에 매료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온건한 개혁주의자들(대부분 친노무현 또는 친민주당)이다. 이들은 운동이 신자유주의 정책 등을 문제 삼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책임까지 꼬집어내는 것을 마뜩찮아 한다.

세월호 참사는 무한 이윤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와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 낸 참사였다.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혹을 해명한다는 차원 이상이어야 하고, 궁극으로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 시스템을 향한 여정 위에 있어야 한다.

추천 소책자

개정
증보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승주 지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 빌 클린턴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줬고, 이것이 그가 대권을 잡는 데서 어느 정도 주효했다. 그러나 4월 7일 시리아 공군 기지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빌 클린턴이 한 일과 판에 박은 듯이 닮아 있다.

1990년대(대부분 빌 클린턴의 재임 기간)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전투기를 출격시킨 횟수는 22만 8천 번에 달한다.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이를 “영공 점령”이라고 불렀다. 또, 빌 클린턴은 1998년 8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기지를 폭격했고, 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의약품 공장도 화학 무기 공장일 것이라며 폭격했다.

이런 폭격들로 해결된 것은 없다. 하지만 미국이 자신의 세계 패권을 천명하는 방법이 되긴 했다. 당시 누구도 미국의 독보적 지위에 도전하지 못했다. 미국은 냉전의 승자였고 1991년 [결전전을 일으켜] 이라크 군을 박살낸 상황이었다.

오늘날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금융 위기로 약해졌고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경쟁국들은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 기간에 트럼프는 미국이 대외정책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낭비한다고 비판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클린턴스럽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은 이렇다: 국가 안보 기관들이 트럼프를 상대로 승리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정보 기관들과 전쟁을 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고 있었고 그 때문에 군 장성 출신의 초대 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물러났다. 플린이 물러난 자리를 메운 인물은 군부 내 주류에 좀더 가까운 H R 맥마스터이다. 그와 함께 미국의 세계 정책을 관장하는 인물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도 군 장성 출신자이다.

그렇다면, 4월 7일에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은 군 장성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뜻일까?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대안우파’ 이데올로기 스티브 배넌이 폭격 직전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밀려난 사실이다.

더욱이 대서양 양쪽[미국과 유럽]의 대서양주의자들은 쌍수를 들며 시리아 공격을 환영했다. 이전까지 트럼프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신문들이 이제 ‘시리아 폭격은 우리[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되살린다’(미국 《뉴욕 타임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지도력을 확인시켜 준 것을 환영한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힐러리 클린턴과 미국 안보 기관의 관료 상당수가 수년 동안 주장한 것을 트럼프가 실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시리아 아기들”의 수난을 키울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

이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반대편에 서서 시리아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과 미국 안보 기관의 관료들은 버락 오바마가 [아사드 정권과는 충돌을 피하며] 주되게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를 상대하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시리아에 개입한다며 크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가 군 장성들에게 정복당했다는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배넌이 밀려난 것은 그가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별인 궁중 암

투 때문인 듯하다. 이번의 시리아 공격은 트럼프 자신이 결단한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하듯 시리아의 “예쁜 아기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동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아기들의 미국 입국을 막은 것이 바로 트럼프다.

토마호크

더 괜찮은 설명은 역사가 그럭 그랜딘이 《더 네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찾을 수 있다. “트럼프가 쏜 토마호크 미사일의 목표물은 시리아의 화학 가스

가 아니다. 그보다는 트럼프에 반대해 온 미국 내 자유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트럼프를 가리켜 푸틴에 친화적인 반(反)미국적인 인사라거나, 그간 초당적으로 추진한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정책의 배신자라고 부르며 트럼프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중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시리아 공격을 명령했을 때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던 때였다. 한 중국인 학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를 종이 호랑이로 봤을지라도, 앞으로는 좀더 심각하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여전히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는 이전까지의 정책 방향을 뒤집고 아사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바마가 시리아 문제에서 그토록 몸을 사린 것은 그것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2의 이라크 같은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시리아에 병력을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방공망을 갖추고 시리아 영공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비록 나는 군 장성들이 배후에서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매티스와 맥마스터 둘 다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온 것은 맞다. 트럼프는 자신이 경멸하던 선임자의 흉내를 내며 시리아와 러시아를 두고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49호 / 번역 김중환

청년·학생 모여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광장

4월 29일(토)~30일(일)

장소: 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참가 신청 : workerssolidarity.org/forum2017



이호중

전 '세월호 침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유가족 추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팀장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대협실장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전 하나 줄이기》저자



유재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분회장



이정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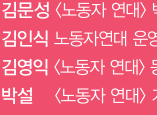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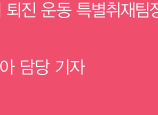
이현주

《노동자 연대》 여성 문제 담당 기자



김문성

《노동자 연대》 박근혜 퇴진 운동 특별취재팀장,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영익

《노동자 연대》 동아시아 담당 기자



박설

《노동자 연대》 기자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자



... 등

시간표

4월 29일(토)

10:00~11:30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 이호중

《자본론》 출간 150년 —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의미 있는가? 이정구 (선택 강연)

11:50~13:20 (선택 강연)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 가는 한반도 김영익

14:40~16:10 (선택 강연)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 이현주

16:30~18:30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 마르크스주의와 계급 김하영

박근혜 퇴진 운동의 교훈 최영준, 권영국, 박병우

4월 30일(일)

10:00~11:30 국정 역사교과서 비판 — 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첩의 중

11:50~13:20 (선택 강연)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국가는 무엇인가? 김문성

14:40~16:10 (선택 강연) 왜 핵발전은 나쁜 에너지인가? 이유진, 장호중

16:30~18:00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김인식

비정규직의 서러운 현실과 저항 유재희, 박설

러시아혁명과 '역사적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의 의의가 있는가? 최일봉

※ 웹사이트(workerssolidarity.org/forum2017)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가비

이들 30,000원 하루 17,000원

대학생·청년실업자 이들 20,000원 하루 12,000원

청소년 이들 10,000원 하루 6,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참가비 납부 계좌 국민은행 017001-04-089255 / 농협 100037-56-119794 (예금주 백은진)

안철수 친기업 성장과 보수, 문재인 전략적 모호함, 심상정 비교적 친노동

새누리당의 후신인 두 당이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떨어져 군소 후보로 전략하면서 집권당 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상 최대 시위를 다섯 달 동안 벌인 사람들에게는 현 대선 국면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촛불 운동 덕분에 당선권에 쉽사리 접근한 두 주류 야당 후보들이 촛불의 염원을 구현하기 보다는 중도보수 유동층 끌어들이기 경쟁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과 동맹해 호남의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 기댔던 안철수는 최근 '민주당보다는 기업주 출신이 낫다'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은 이런 안철수를 정권 연장적폐 세력과 손잡았다고 비판한다.

경제·노동 공약에서 문재인이 안철수와 차별성이 있다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일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춘다며 반대하는 문재인이 충분한 재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 같지 않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고도 하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 노동제이고, 예외적으로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노동부 행정지침을 출발점 삼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주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대단한 양 포장한다. 52시간 제한은 집권해서 노동부의 행지침만 폐기해도 되는 문제다.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그 추진 방식을 주로 비판한다. 최근 공무원 노동자 집회에서는 마지못해 공무원 성과퇴출제를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말이다. 문재인은 줄곧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받았던 문제

인이 2017년 대선 후보 검증과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한국노총의 노동정책 질의에는 시한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수모를 감수하며 지각 답변을 받아 줬지만, 노동계와 거리두기로 보수층에게 어필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안철수가 차차기 정권이 들어설 5년 뒤에야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비판 받았는데, 문재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만 하고 분명하게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주요 야당 후보 중 가장 늦게 박근혜 퇴진 요구에 지지를 보낸 사람이기도 하다. 그레 놓고는 현재의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승복하겠다고 했다.

안철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포퓰리즘적 기반이 있는 문재인은 좌우 양쪽에서 민감한 쟁점에는 입을 다무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비판을 피해 가려 한다.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 규제프리존법, 사드 배치 등등. 물론 11일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핵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해 모호함을 조금씩 더 견어내기 시작했다.

문재인의 오른쪽 눈치보기가 심해진 것은 안철수의 급부상을 의식해서 일 것이다.

안철수는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며 전통적인 성장 담론을 되살린다. 또 정부는 대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 닦는 것만 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는 나서지 말라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규제프리존 법처럼 박근혜가 혈안이 돼 통과시키려 했던 규제 완화 조처들을 찬성하고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증여세 인상에 반대한다. 부자 증세에 반대하니 정부 재정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고 공

대선 후보 주요 입장			
주요 요구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사드 배치 철회	X	X	O
성과연봉제 폐기	△	X	O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입장 없음	X	O
철도, 의료, 에너지 민영화 반대	입장 없음	모호 (삶에 밀접한 관계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O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비정규직 사용 금지	△ (정규직 고용 원칙)	입장 없음	O
규제프리존법 폐기	△	X	O
최저임금 1만 원(즉시)	모호 (점진적 인상 노력)	O (2022년)	O (2020년)
파견법 폐지	입장 없음	입장 없음	O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O	유보	O
임금, 조건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X (주 52시간)	X (연간 1800시간)	△ (주 40시간, 연간 1800시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O	X	O
공무원, 교사 노동자 노동3권 보장	X (노동기본권 보장)	X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지위회복)	O
국공립 보육시설 40%로 확충	O	입장 없음	△ (비율 제시 안 함)
테러방지법 폐지	입장 없음	X	O
차별금지법 제정	X	입장 없음	O
파업 손해 가압류 금지	입장 없음	△ (제도 개선)	O
법인세 인상	X	X	O
핵 발전 중단	△ 신규 원전 반대	△ 신규 원전 재검토	O 신규·건설 중 원전 모두 중단

※ 19대 대선 공약 발표(2017년 4월 11일까지) 기준

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계급의 소득을 늘리는 계획은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딸의 재산 공개 거부로 구설수에 오른 안철수가 상속증여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도 부도덕하다.

당연히 박근혜의 노동 개악 폐기나, 민주적 권리 보장과 회복에 대한 공약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 때도 찬성했다.

기업주 출신 안철수가 싫어서 차라리 문재인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실천과 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반면,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노동계의 요구를 성과연봉제 완전 폐기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파견법 폐지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야당 후보들과 달리 노조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노란봉투법)나 위험업무 정규직화, 고통분담은 상위 1퍼센트부터 등을 분명히 말한다.

원외 진보정당인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도 출마해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도 주장한다. 진보당 해산이라는 국가 탄압을 겪은 후보답게 테러방지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개정으로 경찰차벽과 물대포 등을 금지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당선 가능성이 큰 두 대선 후보들이 벌써부터 노동자와 퇴진 촛불의 염원을 외면하고 우경화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투쟁과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김문성

박근혜 일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인과 책임 전가로 버티지만, 대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들의 ‘재판 투쟁’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들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비리 재판의 뷔페 같았을 것이다.

4월 10일 최순실·안종범 재판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JTBC 기자가 확보하는 과정을 도왔던 더블루K 입주 건물 관리인이 나왔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소유자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면 서 자기 것이 아니라면 최순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최근 한 언론은 최순실이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에게 3년간 3억 7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아마 이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는 데서도 비서 구실을 한 대가였을 것이다.

정권 차원 뇌물 거래의 연결 고리 안종범은 그 와중에 깨알같이 개인적으로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의 심부름을 하는 과

정에서 김영재 등에게 명품 선물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안종범은 “부끄럽다”면서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 때마다 변호인이 입회했는데, 변호인이 방관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10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지원 문제로 구속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자 전 복지부장관인 문형표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의 재판도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이재용이 합병 전에 홍완선을 직접 만나 “무조건 성사시켜

▶ 9면으로 이어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대로 한통속 범죄자들이 구치소 공동체가 되고 있다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문자 남기고 자살한 특성화고 학생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하라

최대현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수연 학생은 ‘현장실습’이란 이름 아래 콜센터 격 무에 시달리다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일하던 곳은 분명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였지만 그는 LG유플러스 소속이 아니었다. LG유플러스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주)LB휴넷이라는 회사 소속이었다.

범LG그룹의 계열사로 2009년 설립된 (주)LB휴넷은 외주화 전문 업체로, 전체 매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벌어들인다. 2015년에는 7백44억 원, 2014년에는 6백55억 원을 그렇게 벌었다.

‘간접고용’ 노동자였던 숨진 학생 홍 씨는 원청인 LG유플러스에서 사실상 일했던 것이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여는 등 원청에 책임을 묻는 이유다. 아비하게도 LG유플러스 부회장 권영수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나는 모른다”고 잡아땀다.

게다가 홍 씨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신분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해지방어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이 부서는 “멘탈이 부서진다”고 불릴 정도로 실적 압박이 심한 곳이다. 실적을 못 채우면 퇴근 시간 이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전화를 돌리거나 과제를 해야 했다. 홍 씨는 ‘깜지’도 썼다. 그가 아빠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는 “나 콜 수 못 채웠어”였다.

(주)LB휴넷은 이렇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는 초과근무나 상품 판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홍 씨와 학교·회사가 맺은 실습협약서(2016년 9월 2일)에서 현장실습수당은 1백60만 5천 원이었지만 회사는 일주일도 안 돼 근로계약서(2016년 9월



프랑크푸르트노동운동연구소 제공

정부 정책이 학교를 ‘파견 업체’로 만들고 있다

8일)를 따로 쓰며 임금을 낮췄다. 이에 따르면 기본급이 첫 달 1백13만 5천 원, 2월차 1백23만 5천 원, 3월차 1백28만 5천 원, 4~6월차 1백33만 5천 원, 7월차 이후 1백34만 5천 원이었다.

그런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홍 씨가 받은 임금은 2016년 10월 86만 4천5백20원, 11월 1백16만 3천2백60원, 12월 1백27만 2천9백 원, 2017년 1월 1백37만 1천20원이었다.

어이없게도 ‘이명박근혜’는 이런 회사에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선정 대통령표창’을 줬다(2011년도,

2014년도). (주)LB휴넷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아직도 현장실습생 10명이 남아 있다.

취업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교육 활성화, 일학습병행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취업률 올리기를 강조하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싼 값의 하청·파견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취업률은 특성화고 교장과 교감의 성과급 평가 기준에 포함됐고, 지금은 폐지된 학교성과급에도 주요 지표로 들어가 있었다.

이런 탓에 학교는 학생들을 전공

과 상관도 없는 업체에까지 현장실습을 보냈다. 홍 씨가 전공한 과목은 ‘애완동물과’였다. 2015년 기준으로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 가운데 20.5퍼센트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 학교와, 싼 값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취업률이 올랐다고 떠들지만, 정작 ‘좋은 일자리’ 취업률(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2년 79.6퍼센트에서 2015년 58.8퍼센트로 줄었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의 김 아무개 씨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된 경우였다. 그를 고용한 은성PSD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1~2주 교육한 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했다. 이렇듯, 현장실습제도는 교육도 아니고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 제도로 봐야 한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체로 파견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해야 한다. 더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 8면에서 이어짐

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전 재판에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한 후 홍선선이 안종범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범들이 재판에서 창피를 당하는 시각에 박근혜는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투입된 옥중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 벌써 네 번째 조사다. 특수부 검사가 투입된 것은 뇌물죄 혐의 때문일 것이다.

“경제 공동체”이자 “또 하나의 가족”으로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구속된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은 바로 그 뇌물죄 혐의 때문에 “유죄 운명 공동체”가 돼 있다.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셋 모두 공범이 되고 형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죄 운명 공동체”

이 때문에 7일 재판이 시작된 이재용은 삼성이 낸 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이재용 측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해 나눈 대화를 특검

이 어떻게 아느냐고도 반론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이 박근혜 독대 후 측근 임원들에게 대화 내용을 전했다는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승마협회장을 맡아 정유라 지원을 처리한 삼성 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박상진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다. 이는 특검에게 카드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추가 70억 원을 냈던 롯데 신동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말이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이 재단 출연금 전반의 성격을 뇌물로 볼지 조만간 혐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난 대중의 투쟁이 자야낸 압력 때문에 분노의 초점이 된 몇 명을 구속했지만, 가능한 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싶은 지배계급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제는 유죄 판결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면 부인을 하는 수밖에 없

는 박근혜는 10일 변호인단 9명 중 7명을 해임했다. 구속을 막지 못한 화풀이는 아닌 듯하다. 도움도 안 되면서 가장 설쳐 댄 유영하는 유입됐기 때문이다.

유영하는 부패의 말단 고리 구실을 했을 청와대 전 비서관 윤전추와 함께 박근혜가 면회를 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결국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어떻게든 반격할 기회만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기춘이 최근 측근 면회 과정에서 “최순실을 어떻게 모르겠냐”고 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부인이 뻔뻔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했 것이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우병우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이 이감되기 전까지 이 위선적인 공범들이 모여 있던 서울구치소의 정문 현판 문구는 마침 “희망의 시작, 서울 구치소입니다”이다. 박근혜 일당의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작은 희망의 시작일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정액(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기업·보수 바이러스 유포자 안철수

안철수는 “낡은 과거의 틀을 부숴 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미래’는 그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선거 구호다.

안철수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안철수는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이 나라,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라며,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 연설문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설문이 아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개혁에도 국민 통합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바마가 국민에게 한 별 볼 일 없는 약속마저 배신하고 고통전가와 제국주의 정책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그 실패의 희비극이 교차한 결과가 트럼프 당선일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의 미래도 밝지 않다.

사실 5년 전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안철수 현상’으로 불린 광범한 지지를 불러오기도 했다. 그때의 ‘새정치’를 이제 ‘미래’라는 말로 바꿔 부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 3월 25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경선에서 렌터카를 동원해 주민 1백30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캠프 관련자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런데 불법 선거 연루자는 얼마 전까지 안철수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캠프의 국민참여본부장을 맡고 있는 측근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 조직국장으로 밝혀졌다. 안철수와 무관하지 않을 이런 ‘차떼기 선거인단 동원’이 그가 말하는 “반칙 없는 사회”의 미래일까?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안철수가 최근 촛불 집회를 깎아내리고 보수층에 추파를 던지는 행보를 보면 그가 말하는 미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짐작이 간다. 지난달에는 기자들이 ‘문재인 후보에 견줘 장점이 무엇 이냐고 묻자 “저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모두 나가지 않았다”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똑같은 문젯거리로 취급하기도 했다. 대중 행동을 안정을 해치는 소란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좌파 취급하는 저급한 우익의 수사를 이용한 것이다.

안철수의 이런 행보는 단순히 보수층 표를 의식한 득표 전략만은 아니다. 퇴진운동이라는 ‘훈란’을 마무리하고 지배계급의 단합을 추구해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에 자신이 가장 적당한 인물임을 지배계급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구속 수감된 당일에 안철수가 “[박근혜 사면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일 것이다. 안철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변명했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직설적 비판이 옳아 보인다.

“사면은 국민이 시끄러울 땐 잡아넣



안철수가 말하는 ‘미래’에 노동계급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었다가 조용해지면 빼내 주자는 말인가? 이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과 뭐가 다른가?”

안철수는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에 헌화하면서 현충원 방명록에다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적기도 했다.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은 “다당제에선 ‘멜팅팟(융광로)’처럼 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당의 정체성과 제 맛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인 ‘샐러드 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집권 후 보수정당과의 제한적 연정 가능성도 흘려 안철수의 ‘대통합 새정치’를 뒷받침했다.

한미 동맹 존중·강화

안철수는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드 배치 찬성으로 견해를 바꿨다. 국가 간 협정을 지켜야 지속적인 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는 같은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지지한다.

국가 간 협정이 차기 정권에서도 바꾸지 못할 것의 기준이 된다면 그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폐기하고 재협상 하겠다고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뒤집을 수 없다. 모순인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의 사드 배치 찬성의 근본적 배경에는 이 나라 지배계급의 필수 덕목 중 하나인 ‘한미 동맹 존중과 강화’라는 맥락이 있다. 안철수는 전시 작전권 환수에도 반대한다.

안철수는 정치에 입문한 2012년부터 이미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전 지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밝혀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안철수의 ‘안보’ 분야 멘토로 알려진 이성출(전 합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합미연합사 북부 당시에 한미 간 공조를 공고히 했다는 공로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다섯 차례나 훈장을 받은 친미주의자였다. 2009년 합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전역한 후에는 대통령 직속 안보총괄점검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 후보로 거명되기도 했다.

노동자 권리는 뒷전

안철수는 기업주 출신답게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과 민간이라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뒷전이다. 신성장 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우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도 시도했던 정책이며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구체성도 떨어진다.

또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은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고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므로 진정한 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공공부문의 전반적 임금 하락 압력을 만들 수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발표처럼 “무기계약직 차별 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청년일자리 해법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퍼센트 수준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고용 한파에서 예외가 아니다.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는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 불안 시대에 기업 복지와 경력 관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어려움을 눈높이에서 찾은 이명박과 박근혜와 뭐가 다를까?

게다가 안철수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가 강제로 나서는 것에 스스로 반대하고 있으니, 그나마 제도의 실효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5년 후인 2022년이나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마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비율 8퍼센트를 적용하면 2020년에는 자연스럽게 1만 원에 가까운 9천5백6원이 돼 안철수의 ‘5년 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장은 뭘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1% 클럽

노동 문제에 인색하고 친기업적인 그의 공약은 그가 살아온 계급적 삶의 궤적과 무관하지 않다.

안철수의 재산은 2천3백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올해에만 ‘안랩’ 주가 상승 등으로 1천억 원 이상 증가한 1퍼센트 부유층에 속한다. 그는 상속증여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데, 최근 자녀의 재산 공개 여부 논란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는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한다. 흔히 안철수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이 얘기돼 왔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안철수는 기업주들 모두에 특이 되는 규제프리존을 찬성한다.

안철수는 IT업계에선 ‘성공한 기업가’다. 그래서 그는 한때 ‘브이소사이어티’ 같은 주식회사 형태의 재벌 사고 모임에 나가 SK, 현대, 롯데, 코오롱, 신세계 등 재벌 2~3세대와 어울리기도 했다.

그중 SK 회장 최태원과 합작해 ‘IA

시큐리티’라는 무선 인터넷 보안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최태원이 2003년에 비리로 구속됐을 때 사면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또 포스코 사외이사 경력으로 ‘황제 이사’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5~11년 포스코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급여뿐 아니라 별도로 스톡 옵션까지 행사해 역대 보수를 받았다.

2012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포스코는 안철수에게 사외이사 급여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2005~08년까지 미국 유학 중일 때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포스코한테서 10여 차례에 걸쳐 1등석 항공권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또 이사회에 참석해서는 포스코의 ‘박정희기념 도서관 건립 후원금 출연’ 등 대부분의 안전에 찬성표를 던지는 전형적인 거수기 사외이사이면서도, 유독 ‘불우이웃돕기성금 출연’에는 반대했다고 한다. 특히 그가 사외이사로 있던 2006년 포스코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투쟁하다가 집회 도중 사망한 하중근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에는 침묵했다.

대표적인 적폐 정책인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한다고 나선 것도 눈꼴사납다. 규제프리존법은 이윤보다 안전이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교훈에 어긋나는 데다가,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에게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혐의를 구성하는 법안의 하나다.

안철수의 최근 강조점은 경제·안보 위기를 대하는 지배계급의 처지를 옹호·대변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고통전가와 저항 역량 약화를 노리는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선 투쟁이 중요하다. 안철수의 국민통합론은 바로 그런 투쟁을 억누르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영일

건설기계 노동자들, 파업을 벌이다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 1만 8천 명이 노동 기본권 보장, 퇴직 공제부금 당원 적용, 산재보험 적용, 적정 임대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4월 13일 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에 나선다.

건설기계분과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건설 노동자도 노동자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현장에서 회사 관리자에게 작업 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데도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불리며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근 서울북부 건설기계지부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는 두 달 가까이 비싼 장비를 세워 놓고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됐기 때문이다. 지금 이 조합원들은 정비 할부비가 밀려 장비비를 빼앗기고 가정은 파탄 나고 있다.

건설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개개



노동 기본권 쟁취! 박근혜가 구속된 이때, 정부와 사용자를 밀어붙이자

인에게 “노예 계약서”를 쓰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있는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라고 부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건설사들은 노동조건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측이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대료는 낮추는 현상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가 쟁취한 8시간 노동과 적정 임대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책임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부 조합원 중에는 현장에서 흙을 내리다가 차량 2대가 전복돼 사람도 다치고 수천만 원짜리 차량도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 그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호수는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사측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사측은 산재 처리를 하기는커녕 사고를 개인 잘못으로 몰아 보상도 일절

하지 않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4월 13일 파업은 투쟁의 시작

4월 13일의 하루 파업은 우리의 숙원인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의 시작이다. 이 파업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그 자신감으로 투쟁을 더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

하고 버티면서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다. 몇 년 전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에 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도 건설사들은 보험업계·레미콘협회 등을 앞장세워 좌초시켰다. 건설사들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면 노동법보다는 경제법적 원리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한다.

국회 역시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 법안을 발의만 해 놓고 통과에는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처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세는 나쁘지 않다. 1천 5백만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를 구속했고 이제 대선이 코앞이다. 우리가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또,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중 대선을 앞두고 파업에 처음 나서는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를 필두로 민주노총의 투쟁이 계속 벌어져, 정부와 사용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을 꼭 막아 냈으면 한다.

박재순 건설노조 대의원
서울북부 건설기계지부 조합원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들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국방 정책에 반대하는 데 앞장서 온 것은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김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저항을 벌여 왔다.

사드 배치에 맞선 지역 주민 운동, 특히 성주 주민들의 항의 운동은 대단했다. 지난해 여름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완강하게 항의해, 통쾌하게도 국무총리 황교안이 성주에 내려갔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도망쳐 나오는 수모를 당했다.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TK가 이틀 줄 물랐다”고 언론에 토로했을 만큼 경북에서 터진 주민 운동은 박근혜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주민들의 항의는 사드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했다. 민주노총(특히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노동자 투쟁, 이화여대 점거 운동과 함께 성주·김



성주·김천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려면, 도시 노동계급의 운동이 성장해야 한다

천의 사드 저지 주민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데 기여했다.

사드 반대 운동은 이런 현지 주민 운동이 중심을 이루고 수도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주민 운동을 지지·응원하며 국회 로비에 주력하는 형태로 전개됐다.

부안의 경험

그러나 지역 주민 운동은 그 휘발성과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국가와 현지 중앙정부의 주요 외교·국방 정책을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의 경험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일부이자 한국 정부의 친제국

주의 정책이다. 즉, 국가 대사와 관련된 정치 문제이다. 지역적 항의 운동만으로 이런 성격의 정책을 최종 패퇴시키는 건 쉽지 않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배치를 강행할 만큼 미국과 한국의 지배자들도 걸려 있는 판돈이 크다.

과거의 경험도 살펴봐야 한다. 최선의 결과로 지역 주민 운동이 중앙정부의 특정 정책에 맞서 승리하더라도, 중앙정부는 같은 정책을 밀어붙일 다른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 핵폐기장 저지 운동의 경험이 그랬다. 2003년 부안 주민들은 강렬한 저항으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일 년도 안 돼 다른 지역(경주)에서 핵폐기장 건설 부지를 구할 수 있었다.

주민 중심의 현지 직접행동과 서울에서의 국회 로비 위주 활동으로 이원화된 사드 저지 운동에서 노동계급의 동참을 중심에 둔 투쟁 계획은 처음부터 전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이 약하다 보니, 국회(핵심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들)를 움직일 만한 충분한 압력이 생기지 않아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국회 로비도 여의치 않았다.

반면 지난해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노동계급의 참가, 특히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를 가장 경계했다. 독재정권 시절의 “불순세력”과 본질적으로 같은 뜻의 “외부세력” 운운하며 성주·김천의 운동이 정치화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지난해 김천에서 지역 유지들이 김천 현지의 노동조합들을 “외부세력”으로 지목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노동계급의 운동은 한미 양국의 군사주의 정책을 실제로 저지할 잠재력이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보다 더 큰 타격을 자본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물론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도록 하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북한과의 대치라는 문제가 한국인들(노동계급을 포함한)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제국주의에 맞서 노동계급이 저항할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제국주의의 간 갈등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방예산을 계속 늘리고 미국의 요구로 막대한 무기를 수입하며 사드 배치 부지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민영화, 구조조정 등 노동계급의 경제적 조건을 공격하는 일과 동전의 앞뒤 관계로서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낳는 전쟁과 핵무기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하며 제국주의와 전쟁을 끝장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은 노동계급뿐이다. 자본주의의 작동은 노동계급의 정치적·경제적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전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혁명적 정치 조직이 노동계급의 일상적 투쟁에 뿌리를 내려 노동계급의 여러 운동을 연결하고, 체제의 특정 측면에 반발해 일어난 운동들을 체제 전체에 맞선 보편적 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따라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드 반대 운동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확고하게 반대하며,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를 강조하고 이를 구현할 정치 조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영익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대선 기간인데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로 서두르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레이더가 이미 3월에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4월 안에 레이더 배치 시험 작업을 완료한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6~7일 미·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실낱 같은 기대를 걸었으나, 미·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 한 장 만들지 못하고 끝났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꽤 지속될 듯하다. 지난해 7월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계 자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3월 한 달 중국 현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토막 났다.

이 와중에 1, 2위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거듭 실망시키고 있다. 최근 안철수는 "국가 간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측은 한때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던 안철수가 '특하면 말을 바꾼다'며 비판했지만, 문재인도 최근 "북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정권 교체가 돼도, 새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획기적으로 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리아

4월 7일 미국이 시리아 공군 기지를 폭격했다. 트럼프는 시리아 독재정권에 희생된 아이들 때문에 폭격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 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떠들어댔으니 역겨운 위선자다. 트럼프는 이번 폭격으로 자신이 결코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음을 과시했고, 서방 지배자들은 트럼프의 '변신'을 대환영했다. 무엇보다, 시리아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은 동아시아



사진 출처 미 해군

트럼프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던진 위험한 카드 4월 8일 한반도로 향하기 시작한 칼빈슨 호

를 향해 던진 메시지가기도 하다. 시리아 폭격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플로리다에서 만찬을 함께한 직후에 벌어졌다. 폭격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다. 일본에 정박한 다른 항공모함이 있으니, 한반도 인근에 미군 항공모함이 2척이나 전개될 참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트럼프에게 김정은 참수 작전, 전술 핵 한국 재배치 등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건의했다는 얘기도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칼빈슨 호 배치로 북한이 조만간 감행할지 모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견제하려는 것 같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칼빈슨 호

배치로 북한에 미국의 군사력을 보여 주려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말했다. 중동에서 군사 개입을 강화하더라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힘을 뺄 일은 없다고 중국·북한 등에 보여 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칼빈슨

이 때문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쌓이고 있다. 서해상에서는 중국 항공모함이 훈련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두 제국주의 강대국의 항공모함들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힘을 과시할수록 북한이 더 강하게 반작용할 공간만 커진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시리아 폭격을 비난하며 이렇게 밝혔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며 핵전력을 강화해 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 번 옳았을

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각의 일면적 예상처럼 현 긴장 국면이 당장 미국의 북한 폭격이나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지만, 두 제국주의 국가 모두 지금 한반도에서 전면적 충돌을 감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등장 이후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심해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축적될 것은 분명하다. 최근 트럼프는 국방예산을 10퍼센트가량 증액한다고 했는데, 증액분 5백40억 달러는 남한 1년 국방예산보다도 많을 뿐 아니라 북한 국내총생산보다도 1백억 달러 이상 큰 액수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문제를 주시하면서 차기 정부의 친제국주의(미국의 군사주의 정책) 협력을 경계하고 반대해 나가야 한다.

김영익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인민전선이란 무엇인가?
- ★ 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 ★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 ★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에 진상
규명이 부족한 상황인가?
- ★ 인하대
교수회가 총장 퇴진 운동에
나서다
- ★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F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